

맘다니와 강선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광화문·뷰



어수웅
논설위원

트럼프 치하 미국에서 진보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타가 있다.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로 뽑힌 33세 조란 맘다니다. 진보 정치인답게 공약 하나는 화끈하다. 주택 임대료 동결과 무료 대중교통, 재원은 상위 1% 증세다. 대중이 젊은 진보 스타에게 환호할 때, 불편한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여년 전 뉴욕 컬럼비아대 입학원서를 쓸 때 수험생 맘다니가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는 인종에 아시아인과 흑인 둘 다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이다.

맘다니는 결국 그 대학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인종 우대하는 미 교육정책을 두 배로 활용하려는 꿈수였다. 그 여인이 들끓었다. 사회적 약자 편이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게다가 그는 뉴욕 최고 명망가이자 부자집 아들, 엄마는 인도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감독 미라 네어, 아버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권자 출신 세계적 학자 무함마드 맘다니다.

우리나라 좌파라면 그 정도는 하찮은 실수 아니냐고 할 것이다. 더한 갑질을 하고도 마지막까지 버티다 나마한 강선우 의원을 보자, 보좌관에게 시킨 화장

실 변기·음식물 쓰레기 갑질과 그의 번지르르한 말 사이의 격차 이야기다. “결국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국격을 올려준다고 생각해요. 같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다. 행동과 말을 완벽하게 전복시키는 대표적 사례 아닌가.

역설적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 1기 내각과 인사청문회는 큰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성’이나 ‘사회적 약자’ 대변한다는 소리를 사회적 약자 위한 정당이라고? 이제 차마 ‘진정성’ 운운 못 할 것 부실한 인사청문회, 망외의 소득 차라리 ‘진보’라는 간판은 때라

차마하기 부끄럽게 됐다는 역설 말이다. 남편이 국내 최대 로펌 변호사이고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한 나마 의원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부는 물론 통일부 중기벤처부 등 많은 장관이 강남의 신축·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다. 그게 죄라는 게 아니다. 강남 좌파라도 당연히 진보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의 정치다.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시절에 미국 네이버 자회사에 딸을 취업시켰다. 딸은 미 영주권을 얻자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다. ‘아빠 찬스’다. 통일부 장관의 아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장관은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은 ‘생계형’이고, 법안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청문회에서 강선우 의원을 엄호하면서 한 말은 그래서 더 인상적이다. “엄마들은 힘이 듭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 의원이 자기 딸은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아들은 회계 책임자로 인건비를 받게 해 준 ‘모성애’의 소유자였음을 기억하라.

반복하지만, 부자도 엘리트도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할 수 있다. 결과 속이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던 시대나만큼, 정치만 하지 않았어도 그러려니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진정성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구호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일회용품으로 소비할 때다.

기억에 남는 책으로 캐나다의 젊은 철학자 앤드루 포터의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이 있다. 그의 바로 전 책은 ‘혁명을 팝니다’였다. 운동권 출신 대한민국 86세대 정치인들의 필독서로 추천한다. 예전의 그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가짜 혁명과 거짓 진정성을 팔아 자기 지식 미국 유학 보내고 강남 아파트 입성할 속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도 다행 아닌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과 진보 정당이라는 허울 벗어 던지고, 이제 본모습 그대로 보수 정당과 겨룰 수 있을 테니까.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2]

한겨울의 눈덩이 좌판

1983년 초, 눈보라가 한바탕 몰아치고 잦아든 다음 날, 뉴욕 거리 한 모퉁이에 미술가 데이비드 해먼스(David Hammons·1943~)가 좌판을 벌였다. 알록달록한 천 위에 상품처럼 포장된 내용은 동글게 문쳐 만든 눈덩이들. 크기 순서로 나란히 진열한 걸 보니, 클수록 값이 비싼 모양이다. 혹 요즘 같은 무더위라면 반갑게 팔아 줄 수 있겠련만, 잔설이 곳곳에 나뒹구는 한겨울에 눈덩이를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해먼스는 아프리카계 흑인 어머니 아래서 여러 형제와 가난, 차별을 받 먹듯 겪으며 자랐다. 캘리포니아 오티스 미술학교에서 흑인의 삶을 진솔하게 그린 사실주의 화가 찰스 화이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1974년 뉴욕으로 이주한 다음에는 회화와 같은 전통적 매체를 거부했다. 대신 숯불과 흑인 이발소에서 수집한 머리카락, 먹고 남은 닭 뼈처럼 실제로 흑인들의 몸과 삶에서 떨어져 나온 온갖 비루한 것을 모아 작품을 만들었다.

사진 속 해먼스는 거리에 늘어선 여느 불법 노점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월가를 중심으로 금융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뉴욕에서 금방 녹아 사라질 눈덩이에 정성껏 값을 매겨 판매하는 행위란 자본과 금융의 세계에서 ‘가치’가 무엇인지 신랄하게 하는 질문이다. 유난히 흰 눈덩이들은 월가의 백인들과 노점의 흑인들로나닌 세계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해먼스는 이후 흑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표적 미술가로 각광받으면서도, 갤러리에 전속되기를 기피하고 부유한 컬렉터들이 모이는 개인전의 개막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천 대밭은 초라한 삶이 예술의 주체라던 작품 또한 미약하고 비천해야 ‘사실주의’라고 믿는다. 그는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려 애쓰는 예술가다.



데이비드 해먼스, 눈덩이 판매, 1983년, 뉴욕의 퍼포먼스 장면, 도우노 베이 포스트&코퍼레이션

포스트&코퍼레이션

社 說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7월 임시국회(8월 4일까지)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이라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 행위’를 합법적 노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 투자 확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

노조가 던진 무리한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 공약화하고 이를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화했을 때의 부작용은 이미 적지 않게 겪어 보았다. ‘최저임금 1만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그렇거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언행이 드러나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그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그의 언행은 민주당 내에서 더 시끄럽다. 최 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현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 여러 인사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최 처장은 과거에 “문재인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했다. 2022년에 그는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왜 이리 XX 같은가”라고 했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무능한 아이”라고 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협탄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자신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인사처장 임명 이후 자신의 발언이 담긴 게시물과 영상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민족의 커다란 축복” “5년은 너무 짧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길게 했으면” 처럼 낮 뜨거운 평가가 대부분이다. 김혜경 여사가 2022년 법원카드 의혹을 사과하자 “대

생해 많은 부작용을 낳은 사안들이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그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이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와 어떻게 노사 협상을 하나. 노조가 불법 파업에 배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과격한 투쟁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도 사용자 측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없다. 노사 균형의 흥내도 내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 법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造船) 협력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을 이대로 강행 처리하면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조선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청업체의 점거 농성으로 한화오션이 큰 피해를 본 것이 얼마 전이다. 민주당은 전문가, 노사 대표 등을 포함한 공청회라도 열기 바란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박근혜-트럼프 관세에 치이고 안에선 집권당의 증세, 노조 우선 공세에 치이는 고립무원 상황이다. 이르고서 경제를 말하라.

정상이라 보기 힘든 언행 인사처장, 공직사회 납득하겠나

한민족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자신이 개발했다는 인사 평가지수(APM)에 기반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는 96점을 주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겐 마이너스 점수를 줬다.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공무원들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가 객관적 인사 자료가 아니라 APM과 같은 기괴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이뤄진다면 공직 사회가 이를 납득하겠나. 이런데도 민주당 인사들은 “공직 사회의 철밥통 이미지를 깰 인사”라며 방탄을 하고 있다.

최 처장은 한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유세를 보더니 눈을 흘리기도 했다. 그가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미 낙마한 갑질이나 논문 표절 장관 후보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사 문제가 되고 있다.

스토킹범 접근하면 자동 경보 울리는 시스템 도입을

경기 의정부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여성은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미처 누르지 못했다. 지난 달 대구 달서구에서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40대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경찰은 당시 스토킹범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성 집 앞에 가해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보안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가해자가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소용이 없었다. 현재의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의정부 여성 가해자는 경찰에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 통화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만 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허락이 필요한 전자발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범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알 수 없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차지 않고 있어 누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때도 비슷했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았고,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실명 차고 있었다더라도 위급 상황에선 누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

1947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는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가해자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고 있는 수준이다. 이것만으로 필요한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가해자 동선을 사전에 감시하고, 필요시 가해자 신병을 확보해 범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이나 가해자 구속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도 원격 위주인 경찰의 신변 보호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나 휴대전화를 통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전자발찌도 경보를 울리게 해 접근할 엄두를 내기 어렵게 해야 한다. 우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도 구속영장 심사서 스토킹 범죄가 재발 및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도 범인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뒤 벌어졌다. 지난달 대구 스토킹 살해 사건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벌어졌다. 스토킹 범죄는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 판사들이 이상황을 알아야 한다.

— 운동권 판사 출신 의원의 황당한 논리 —

"재벌 회장, 왜 1년에 200억 받아 가나?" ... 경영학과 나왔다며? 그 이유도 몰라?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 사시 공부하느라 | 경제-경영학 공부 1도 안한 듯 | 경제부총리에게 586 운동권 경제학 입장 훈계

최기상의 (실질경제학)

남랑 특집 코미디다. 《명절 칼부림》 떠나 나올 법한 말이 구울철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하준청 생략)의 질의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재벌 회장이 직원들을 돕습니까? 수많은 보통 시민들이 재벌 회장을 돕습니까? 재벌 회장은 ‘돈’ 밖에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벌 회장이 돈을 일 년에 200억 받아갑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200억 받은 만큼 일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200억 받아 갈 근거를 못 겁니다.”

《재벌 회장》이 일도 하지 않고 고액을 챙긴다는 억지 주장. 《분업》과 《자본의 한계 생산》에 대한 몰이해다.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그건 《갑질》. 일을 맡기고 《급여》를 챙겨주면 《분업》. 회장은 경영을 한다. 의사결정을 한다. 가치창출을 한다. 일자리를 만든다.

최기상의 말대로 하면 가난 대물림

황당 주장은 이어진다. “나라에서 세율 90%에서 180% 내라. 이거 꼭 근거 있어야 하나요? 200억을 벌 단하게 그 사람 일했습니까? 200억 받은 사람을 100억만 돈 준다고 하면, 그 회사 실적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근거가 없어요.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또 헛소리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실적》보다 《해외 이전》이다. 미국 텍사스 주는 기업 유치에 위해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등 엄청난 혜택을 준다. 기업이 몰려간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좋은 일자리를 더 줄어든다.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부의 대물림》문제 제기도 엉터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상속제 때문이다.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지요?”라고 발언하는 걸로 보아 《상속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 것 같다. 자신도 상속을 해주고 싶어 서일 것이다.

상속제는 《노력》할 유인 때문에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리상 자기가 노동을 해서 《노력》해서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최기상》

《노력=노동》 등식은 매우 위험한 가치관이다. 경영도 《노

국회의 저품질 서비스 강매

《소득 격차》는 《생산성 격차》로부터 온다. 밀턴 프리드만, 로버트 루카스, 토마스 사켈트, 로버트 베로, 에드워드 프레스캣 등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을 강조한다. 생산성 향상이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다. 한국은 《수요 확장》에 미쳐 생산성을 박살 내는 중.

《생산 기술》 말고 《경영 기술(management technology)》도 중요하다. 한국은 《생산성 향상》은커녕 《생산성 유지》조차 어렵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보면 안다.

정치는 《대수 서비스 산업》이라고 분류 가능하다. 수입이 불가능해 국제 경쟁이 없고, 저품질 서비스를 강매하는 방식이다. 혁신도 없다. 《중대기 경쟁》과 《음서 채용》을 제외하면, 고용 창출도 없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7월 27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68 뉴데일리 컬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